



보도참고자료

공정거래위원회

2018년 3월 22일(목) 배포

2018년 3월 22일(목) 오전 10시부터
보도 가능

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

담당과장: 이동원(044-200-4583)

담당: 장영신 서기관(044-200-4584)

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

- 공정위,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◆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상조, 이하 공정위)는 개정 하도급법^{*}(2017년 10월 31일 공포)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‘하도급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.

* 공식 명칭: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

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

⇒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‘과태료 부과 횟수’로 단일화
[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]

□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(별표4)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,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(연간 매출액), 위반 혐의 금액 비율, 위반 혐의 건수, 법 위반 전력(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)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,

○ 개정안은 ‘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’^{*}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.

* 예)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,000만 원, 두번째인 경우 5,000만 원,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.

- 대규모유통업법·가맹법·소비자기본법·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‘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’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데,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- 한편,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/2의 범위 내에서 감경*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.

* 소비자기본법·표시광고법 등의 시행령에서도 ‘위반 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’ 과태료를 1/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또한, ▶‘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’ ▶‘조사 거부·방해·기피’ ▶‘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’ 등 3개 행위의 경우,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
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‘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’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.

2 기대 효과

-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,
-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3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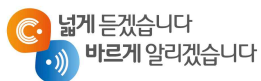
-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,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(2018년 5월 1일)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

※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- ▶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·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②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* 우편 :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(우: 30108)
* 팩스 : 044-200-4656

※ <첨부>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ftc.go.kr



＜ 신구조문대비표 ＞

□ 시행령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----- -----.

□ 별표 4

과태료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범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	근거 법조문	과태료금액		
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	1) 원사업자	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	2,000	5,000	10,000
	2) 원사업자의 임원·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	200	500	1,000

나.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	1) 원사업자	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	2,000	5,000	10,000
	2) 원사업자의 임원·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	200	500	1,000
다.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1) 원사업자	법 제30조의2 제2항	10,000	15,000	20,000
	2) 원사업자의 임원·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30조의2 제2항	2,500	3,500	5,000
라.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	법 제30조의2 제3항	100	250	500
마.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	법 제30조의2 제4항	50	75	100